

박홍근 “법인세 감세 막을 것”

대선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尹 '감세 드라이브' 제동 “민주, 민생입법과제 선정... 민생법안 처리 최우선” 약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대폭 감세와 건축자금을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걸며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선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틀어막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적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냐”며 “당장 숨 넘어가는 서민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이라고 주문하는 셈이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냐. 비전을 제시해 회

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울러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줘야 한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며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

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해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논란과 관련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휘권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며 “지지를 추락으로 내치르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뉴스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대학 관련 업무 담당 기구 마련 필요”

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가 전날부터 이어진 하반기 업무보고회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각 위원회에서 관련 기관들에게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수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정책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등 분청 업무보고를 실시해 학교 증·개축 위해 사용되는 모듈러 교실 비용 부담 커지기 전 대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문화체육관광국,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북도 콘텐츠통합진흥원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2014년 개원한 무주태권도원 활성화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고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전라유학진흥원에서 해줄 것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자치행정국 등의 업무보고를 듣고 도 공유재산의 관리 활용의 부재를 지적하고, 지역대학의 행정권 위임 예정에 따른 대학관련업무 담당 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은 환경복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 소

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북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의 2배 수준인 것을 지적하고 누수를 저감대책을 주문했다. 또,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의 노고에 대해 언급하며 불에 타지 않는 소재의 의복 등 여러가지 장비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농산임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예곡융합첨유연구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성공에 대한 노력을 치하하면서 이와함께 탄소완제품분야의 미진한 부분을 얘기해 전북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아닌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수도권 중심반도체학부 증원에 국민 공감대 필요”

민주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지방 소멸의 시대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신·증설을 통한 정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인재양성 인프라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편중 심화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방대들의 정원미달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가는 학생들의 수도권 출현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흥 의원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의 미래 먹거리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강제규정으로 변경

민주 윤준병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0일,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상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없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므로

매입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경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요건은 있으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며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이고 쌀값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쌀값안정화대책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의 제언 취지를 밝혔다. /정유림기자

뿌리산업 진흥 개정조례안, 도의회 농산경위 심의 통과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12대 의회 첫 번째 법안)으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임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인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

법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확대된 차세대 뿌리기술업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뿌리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보완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정의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뿌리 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22조 시행

규칙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반 공정 뿌리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했고 뿌리산업의 범위도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확대했으며,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고, 뿌리산업 육성의 종합계획 수립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목적을 뒀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